

美 대선 두강 열어야 한다... 경합주 표심 어디로?

한국계 연방의원 역대 최대 5명 가능... 첫 연방 상원의원 유력 선거인단제가 민의 왜곡할 수도... 사전투표 제도 정비 절실

<1면에서 계속> 연방 상원(뉴저지)에 출마한 3선 연방 하원 앤디 김(민주) 의원이 당선되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이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 3인', 영 김(공화)·미셸 박 스틸(공화)·매릴린 스트리클랜드(민주) 의원의 '3선 수성'도 유력하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데이브 민(민주) 의원까지 연방 하원의원에 입성하면 한국계 연방 의원 수는 5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원(일부) 하원 등 선거가 5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시작된다. 시장-검사장 선거 및 보궐선거를 겸하는 지역도 있다. 대통령만은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확보의 싸움이다. 미합중국이란 말 그대로 연합된 (United) 개별 국가들(States)이기에 주마다 개표 방식 및 과정이 독특적이다.

9월부터 이어진 사전투표와 5일 본투표란 엄밀히 말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결정한다. 1787년 헌법 제정 당시 일반적인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만들어진 제도다. 인구 규모로 배분된 선거인단 명수가 3~5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승패 윤곽은 본투표 다음날쯤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며칠 내지 한달 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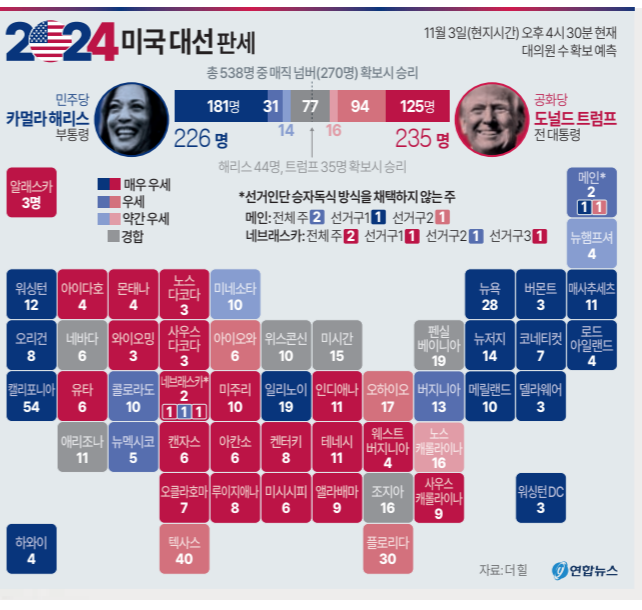
결론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 미 대선은 4년에 한번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치르게 돼 있다. 그해 금요일엔 11월5일이다. 50개 주(州) 유권자가 이날 해리스나 트럼프에게 투표해서 해당 주의 선거인단이 정해진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정당이 임명하거나 선출한다. 해당 주 거주자여야 하며 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당 지도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꾸려진다.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일은 12월 두 번째 수요일 다음 번 월요일로, 이번엔 12월17일이다. 당선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각 주에서 패배한 당 측의 선거인단은 참석할 필요 없다.

1963년 이래 선거인단 수(총 538명)란 헌법에 따라 주별 상원의원 수(각 주 2명 총 100명)+하원의원 수(인구 비례 총 435명)+워싱턴DC에 배정된 선거인(3명)을 합친 수다. 하원의원 수는 10년마다 인구 조사로 조정된다. 선거인단 수에서 269로 비결 경우 수정 헌법 12조에 따라 상원이 부통령을, 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 미역사를 통틀어 1800년에 딱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

선거인단 제도에선 사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헌법을 고쳐야만 하므로 쉽지 않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불복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일어날지 모른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약 280만 표를 더 많이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트럼프에게 패했다. 2000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역시 민주당 후보 앨 고어보다 50만 표 이상 적게 얻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특정 정당에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다 해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레드 스테이트'(공화당)로 불리는 곳들이 있다. 각 주의 지배적 정치 성향은 지난 20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공화당-민주당 지역이었다가 달라졌거나 매번 지지 정당(후보)이 바뀌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투표소 앞에 사전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줄 서 있다. AFP-연합뉴스



11월 3일(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 현재 대의원 수 확보 예측

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변한 곳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2016년 공화당(트럼프)을, 2020년 바이든(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번 대선은 7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표심이 결정할 것으로 지적돼 왔으며 양당 후보 모두 이 지역에 공을 들였다. 유세에 더 적극적이며 관중 동원력을 보여준 것은 트럼프 쪽이었다. 7개 경합주 중 최대 선거인단을 가진 펜실베이니아(19명)가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는 7월 1차 피습에서 구사일생하고도 이 지역을 여러 번 찾았다. 2020 대선에 대해 '부정'을 주장해 온 트

럼프 때문에 주마다 제도를 정비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신분증 확인이 엄격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마저 투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심각한 현실이다. 최근 미시간주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투표한 중국인 유학생이 체포됐다. 그러나 그런 1표조차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엔 무효화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 방식의 하나인 우편투표 관리도 큰 문제다. 일부 주는 우편투표가 접수되는 대로 개표해 대선일 투표 종료 이후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주는 동부 표준시 기준 5일 아침 7시까지 우편투표를 개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으로 2020년 대선 때 펜실베이니아 결과가 나흘이나 걸려 나왔다.

본투표 60일 전인 9월6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지역별로 정해진 날짜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회송해야 한다. 투표소 현장 방문 방식의 사전 투표도 이어졌다. 9월16일(펜실베이니아주), 20일(버지니아·미네소타), 21일(버몬트), 26일(일리노이)부터 현장 사전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이 긴 것도 미 대선의 독특함이다. 사전투표 비중이 2012년 약 30%, 2016년 약 40% 수준으로 점점 늘었다. 2020년 대선에선 우편 45%·투표소 방문 22% 등 사전투표가 67%나 됐던 것으로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드러났다. 코로나19 유행 영향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사망자나 타인 명의 우편투표가 가능해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2021년 1.6사태의 배경이다.

네바다주는 선거일 이후(선거일+4일) 도착해도 소인이 본투표일 이전이면 인정한다. 조지아주에선 해외 및 군인 유권자의 우편투표에만 선거일 이후(선거일+3일) 도착분을 인정해 개표 완료까지 최소 나흘 이상 걸린다. 갈수록 승리 선언이 늦어진 이유다. 2012년 승리 확정 소식이 본투표 당일 밤 11시38분, 2016년엔 이튿날 새벽 2시29분, 2020년엔 선거일(11월3일) 나흘 뒤 오전 11시26분이었다.

본투표 60일 전인 9월6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지역별로 정해진 날짜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회송해야 한다. 투표소 현장 방문 방식의 사전 투표도 이어졌다. 9월16일(펜실베이니아주), 20일(버지니아·미네소타), 21일(버몬트), 26일(일리노이)부터 현장 사전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이 긴 것도 미 대선의 독특함이다.

사전투표 비중이 2012년 약 30%, 2016년 약 40% 수준으로 점점 늘었다. 2020년 대선에선 우편 45%·투표소 방문 22% 등 사전투표가 67%나 됐던 것으로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드러났다. 코로나19 유행 영향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사망자나 타인 명의 우편투표가 가능해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2021년 1.6사태의 배경이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스페인 국민들 수해 늑장 대응 분노... 국왕·총리에 욕설·오물 세례

217명 사망·수십 명 실종... 3000가구 단전 파이포르타 피해 심각... 수색·구호 지원 절실

펠리페6세 스페인 국왕 일행이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현장을 찾았다가 분노한 수재민들에게 욕설·진흙·오물 세례를 당했다. 로이터·AFP·EFE 통신 등에 따르면 펠리페6세는 이번 수해로 최소 62명 사망자가 나온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를 레티시아 왕비, 페드로 산체스 총리,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와 함께 방문했다. 대형해 시대의 영화를 이끈 지중해 항구도시다. 성난 주민들이 국왕과 총리 일행을 에워

싸고 진흙과 오물을 집어 던졌으며 "살인자들" "부끄러운 줄 알라" "꺼지라" 고함쳤다. 온라인 영상에선 청년이 국왕을 향해 국가의 이번 수해 대응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소리쳤으며 마손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하거나 "산체스 총리 어디 있나"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호원들이 급히 우산을 씌워 보호했으나 국왕 부부는 얼굴과 옷에 진흙을 얻어 맞았다. 그래도 주민들을 위로하려 시도

하는 모습이었지만 서둘러 방문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수해 지역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고 AFP 등이 전했다. 이미 지 관리를 잘 해 왔다고 평가되는 스페인 왕실로서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다. 펠리페6세가 이후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온전한 희망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방송 RTVE에 따르면 이날 군중이 던진 물체에 돌과 딱딱한 물체가 섞여 있어 경호원 두 명이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산체스 총리의 차량 창문도 깨졌다.

산체스 총리는 주민들의 고뇌와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이처럼 분노한 것은 당국의 안전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기습 폭우에 사망자 최소 217명으로 3일 집계됐다. 사상자 외에 수십 명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약 3000가구에 전력이 끊겼다. 스페인 기상청의 폭우 '적색경보' 발령부터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안전문자 발송까지 열 시간 넘게 걸리는 등 당국의 대응 탓에 인명피해가 커졌고 이후 수색과 복구 작업도 느리다는 비판이 높다. 산체

스 총리는 2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지역에 군·경 1만 명의 추가 파견을 약속했다. 군인 7500명·경찰 9000여 명이 생존자 수색과 시신 수습 등에 나서게 된다. 피해 지역은 중앙정부에 실종자 수색과 구호·복구 작업 지원이 절실하다. 마리벨 알발라트 파이포르타 시장은 유로파 프레스에 도시 내 여러 지역에 여전히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며 "차 안에 시신이 있어 수습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산체스 총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과실을 살피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겠다"면서도 "지금 은 단합할 때"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기록적인 홍수로 스페인 바렌시아주(州)가 큰 피해를 입었다. 3일(현지시간) 파이포르타 수재민들을 찾은 펠리페6세(우산 밑) 국왕 일행이 당국의 늑장 대응에 분노한 시민들에게 욕설과 진흙·오물 세례를 받았다. 펠리페6세가 우산으로 경호를 받으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대한민국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SINCE 1989,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성장을 돕는 KMAC입니다.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기업가치혁신 | 고객가치혁신 | 공공혁신 | 진단평가 | AI/빅데이터 | 스마트/PI | ESG | 에너지/기후 | 글로벌 | 대학혁신 | 스마트교육 | 미디어